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의 이해

서 국 화

I. 서

- 야생생물보호법 :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동물보호법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야생생물보호법은 생물의 생명 뿐 아니라 사람을 둘러싼 ‘환경’으로서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에 반하여, 동물보호법은 생명체로서의 동물의 보호 측면이 더 강조되는 차이.

cf.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II.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야생생물보호법의 기본 체계

가. 야생생물 보호법은 당사자별로 책무를 부과(제4조)

- 국가 :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국제협약의 준수,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 : 국가 시책에 협조, 관할 구역의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 모든 국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협조

2.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일반 시책

가. 야생생물 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 기본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의 성질
-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야생생물의 서식실태조사 등)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야생생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시행

나. 야생생물의 서식실태조사

- 특별히 보호 또는 관리가 필요한 야생생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

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 정당한 사유없는 학대행위 방지(행위형태의 규정-규제의 범위가 협소함)
- 체계상 동물보호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마. 불법포획한 야생생물의 취득 등 금지

- 최종수요자인 ‘먹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입법적 고려

바. 밧·창애·올무의 제작금지 등

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3.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 위기의 정도에 따라 I 급과 II 급으로 분류
-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
- ‘멸종위기야생생물 II 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

가. 멸종위기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 등

- 환경부장관의 중·장기보전대책 : 야생생물기본계획하의 개별정 종 보호를 위한 부문별 시책의 성격

-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 증식·복원 등 필요한 조치

나. 멸종위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

- 금지 : 누구든지 /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훼손 또는 고사(枯死)(포획·채취등) 금지

- 예외 : 예외사유(① 내지 ⑥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①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④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⑥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상 제14조 제1항 단서 규정)

또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포획·채취 등이 허용된다

- 허가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조건 위반,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외로 사용하는 경우

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의 제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우리나라는

1993. 7. 가입

▶ 사육곰의 수입장려정책과 CITES협약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 허가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허가기준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허가’ 받아야
 - 약사법에 의한 예외
 - 허가받아 수입,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경우 허가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 수입, 반입된 종의 용도와 같은 것으로 봄

-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사용금지

- 양도·양수 등 행위제한
 - 사후관리 : 수입·반입 종의 증식범위 제한/ 양도·양수 신고기한/ 입수 경위를 증명하는 서류 갖추도록

▶ 밀수된 오랑우탄 ‘오랑이’

밀수된 오랑우탄을 동물원에서 양수받아 관람 또는 공연용으로 소유하는 경우,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수단 부재하여 방치되는 상태

- 사육시설

- 허가의 취소

- 보호조치 등

라.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

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확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동물을 ‘동물쇼’에 이용하면서 ‘동물쇼’광고를 한 경우?

고양시의 한 동물원에서 바다코끼리, 샴크로커다일, 오랑우탄, 반달가슴곰 등을 ‘동물쇼’에 이용하면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동물쇼’광고를 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감소를 촉진하여 야생생물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고발에 대하여, 검사는 위와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동물쇼’ 광고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과 개체 수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동물쇼’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과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4. 멸종위기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의 보호

가.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 금지 : 누구든지/ 포획, 포획하기 위한 폭발물·덫·창애 등 설치 및 유독물·농약 등 살포, 주입 금지

- 예외 : 학술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나. 야생동물의 수출·입 제한

- 허가 : 멸종위기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동물 등/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 예외 : 문화재보호법/ 약사법/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

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 뉴트리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

- 포획결과의 신고의무

라.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 환경부장관_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
-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시·도보호야생생물의 지정·보호

5.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관리

-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가.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지정
- 행위제한
- 출입제한
- 중지명령
- 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협의매수
- 지정해제
- 멸종위기종관리계약

나. 야생생물보호구역

- 지정

- 출입제한 등
-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6. 생물자원의 보전

- 가. 생물자원보전시설의 관리
- 나. 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 다. 박제업자의 등록 등

7. 수렵관리

8. 한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등

Ⅲ. 동물보호법

1. 연혁

- 서울 올림픽을 거치면서 1991년 자의 아닌 국제적 여론 등에 의한 타의적 제정
- 제정 당시 조문은 11개 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현저히 낮은 수준 → 2011년에 이르러 47개조로 개편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2. 구조

- 총칙
- 동물일반(반려동물) →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실험동물 → 동물실험
- 농장동물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영업/ 보칙/ 벌칙

3. 동물의 보호 및 관리

가. 동물학대의 금지(제8조)

- 학대의 유형이 제한적으로 규정
- 동물 살해, 상해, 그 외 고통을 가하는 행위까지 규정할 필요성-현재는 단순히 동물을 때리는 경우 처벌의 공백

- ▶ 동물을 학대하는 건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다?
- ▶ 2012. 1.부터 스페인 투우 금지, 우리나라 전통 소싸움은?

나. 등록대상동물 - 현재는 '개'만 해당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4. 동물실험

가. 일반

-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 -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5.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6. 동물판매업 등의 등록

- ▶ 동물의 판매
- ▶ 동물을 죽여서 판매하는 경우?

IV. 결

감사합니다.